

변화하는 시대와 대학의 내부개혁

김 의 수
전북대 철학과 교수



2. 변화하는 시대

1. 글머리에

교육의 개혁과 대학의 변화가 전 국민적인 요구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지금도 이 요구는 절실하고, 이처럼 아직도 그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하고 의회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전 사회적인 변화(의식적 실천적)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별대학의 노력이나, 특히 개별 대학인들의 노력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전제로 하고 — 또한 이상의 일이 가능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 대학이 내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일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1) 민주화의 시대

격동의 시대 80년대를 넘어 21세기의 문턱 90년대 중반에 들어선 오늘의 시대는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세계사적으로 80년대는 민주화의 시대라고 불리울 것이지만, 90년대는 어떤 시대라고 불리울 것인가?

80년대의 격동은 제3세계와 사회주의권의 민주화과정이었다. 먼저 제3세계(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60년대부터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군부독재정권들이 20여 년이 지나면서 민중의 저항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퇴각하게 되었다(콜롬비아 1983, 아르헨티나 1984, 우루과이, 브라질 1985 등). 아시아에서도 필리핀과 한국이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 마르코스의 20년 독재정권이 엄청난 소용돌이(아키노 암살 83.8, 부정선거와 민중의 저항 86.2) 후에 무너졌고, 한국의 철권통치집단 전두환세력이 87년 6월

민중항쟁에 항복하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였다.

두번째의 사태는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격변이다. 80년대의 마지막 해인 1989년 1월 헝가리 공산당과 재야세력의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2월 폴란드의 원탁회의, 5월 헝가리 국경수비대의 오스트리아 국경 철망제거 작업, 8월 이후 동유럽 각국 인민들의 집단 이주 행렬,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정권교체와, 루마니아의 유혈 혁명과 차우세스쿠의 처형으로 이어져 동유럽의 공산정권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은 서독에 흡수되어 통일이 이루어졌다. 또한 동구 사회의 격변을 준비해 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고르바초프 자신의 실각과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가져오기까지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다(91년 말).

이와 같이 80년대를 규정하는 민주화의 대장정은 제3세계와 다수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물론 제3세계의 민주화와 사회주의권의 그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며, 더구나 사회주의권의 민주화가 곧 자본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지와 요구가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는 체제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 함께 '민주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양 세계의 민주화는 이른바 서방 선진 7개국에 속하는 나라들에서 부정부패의 추방과 정치풍토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일본 정치인들의 부패상 폭로와 정계의 전면개편, 이탈리아의 정치권 부패추방 운동 등).

20세기의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일상적 삶의 잡다한 관심사들로부터 보다 큰 역사적 흐름으로 눈을 돌려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2) 국제화의 시대

80년대에 민주정부의 수립에 실패한 한국은 장기간의 반독재 투쟁 경력을 가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주 개혁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김영삼 '문민' 정부는 79년의 12·12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4월 '혁명'을 공인하였다. 그리고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경제정의 실현의 노력도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국제적으로도 문민, 민주정부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취임 1년을 넘기기 전에 최초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쌀수입 개방과 관련한 외교력의 부재와 국민을 속이는 부도덕성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UR협상 타결을 '국제화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논리로 호도하기 시작했고,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로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준비체제를 갖추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가 1차적 위기는 모면했지만, '국제화'라는 새로운 요구는 어느덧 현실성과 성실성을 결여한 채 '퉁치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은 국제화의 시대이다. GATT체제에서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세계의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UR의 후속으로 GR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선진국의 이익이 보다 철저하게 관철되어가고 있다. 특히 소련의 해체 이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세계지배와 자국이기주의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선진국 위주의 국제화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기 쉽고, 제3세계 국가들은 능동적 자세로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 요구 중에는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노동자의 권리 옹호, 환경오염의 예방 등)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계가 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홍수와 급속한 변화의 와중에서도 민주, 합리, 공개의 원칙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 능력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민

주정권으로서의 정통성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출범한 김영삼정부가 정통성 확보의 유일한 길인 민주개혁을 중단하고, 신공안정국(공권력 남용, 시대착오적 이념공세 등)을 조성함으로써 제2의 중대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구시대적 발상과 태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수구적 집단과 개인들이 강력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발전과 희망이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 시대, 국제적인 공개경쟁의 시대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대학인들은 먼저 세계사적인 시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고, 대학의 내부개혁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2. 대학의 내부개혁

1) 대학운영 체제의 혁신

①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30여 년간의 권위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찌들고 왜곡되었으며,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대학사회의 체질은 제도적 운영체제의 혁신을 통해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운영체제 혁신의 기본 원칙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에 있다. 그 첫번째의 과제가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로의 위상정립이다.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파괴된 사회의 균형은 행정부가 3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데에 있다. 그러한 현상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확산되어 고착화됐다. 대학 구성원의 평가와 무관하게 정부에서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고, 총장은 절대적 권한을 갖고 대학을 1인 운영체제로 유지해 왔다. 총장 권한의 극대화는 대학운영 파행의 원인이었다. 이제 총장 직선제도의 확산으로 그 기본적인 문제점의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시도해 온 전국의 교수(협의)회 연합 단체들이 정부 및 의회의 의도적 기피에 지쳐 버린 상태가 되었다. 전국의 교수단체들은 문민정권에 기대를 걸고 1년 반 이상을 기다

러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권리회복 운동을 전개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미 제2대 직선 총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총장들의 태도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일부의 경우처럼 직선 총장들은 자신을 총장으로 뽑아준 교수협의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인정해야 하고, 대학의 혁신을 위한 주체적 노력을 보이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의 운영체제가 총장 1인체제에서 최고의결기구인 교수(협의)회와 집행기구인 총학장 회의로 재정립돼야 한다. 교수회는 책임감을 갖고 미래지향적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총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 대학사회에서 확립적 풍토의 개선과 교육의 다양화가 강조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수회의 위상정립이다.

② 행정과 재정의 개혁

대학의 행정과 재정도 철저히 권위주의체제로 고착되어 왔다. 효과적인 대학교육의 수행을 위한 지원체제로서의 행정제도가 그 본래의 역할을 벗어나 교육의 양대 주체들(교수와 학생)과 교육의 내용을 관리 통제하는 체제로 굳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행정관료가 대학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대학사회의 생동성과 창의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대학교육협의회는 사무국의 사무처 승격과 그 책임자(사무처장)를 교수로 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청해 놓고 있다. 권위주의적 상하관계에 익숙해진 행정직원들은 평교수와 보직교수를 다르게 대하기도 하고, 연구와 강의를 지원하는 일보다는 상부기관의 감사에 대비하는 것을 위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결과로 규격에 짜맞춘 보고서만 요구하고 교육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강의자료 등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은 합리화하여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고, 강의와 학습의 지원은 교수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기 위하여 행정적

원들도 이제는 교육철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교수집단의 협조를 얻어 교육행정 업무를 체계화하고, 교육의 한 주체로서 전문성과 자기발전성을 겸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도 같은 맥락에 있다. 권위주의체제에서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예산집행이 문제가 돼왔다. 이제는 대학이 재정 문제를 공개하여 검은 돈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 교수단을 배제한 채 행정직원들이 예산을 작성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문 교수단이 예산을 작성하며 교수회가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부족은 교육의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점은 정부의 각성과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대학의 재정확보 문제는 화급을 요하고 있고, 각종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입학제와 같은 비교육적인 방법은 제외되어야 하며, 봉건시대적 족벌 비리 사학재단들을 재편하여 정당하고 교육자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재정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직과 보직수당이 대학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던 때와는 달리 대학재정은 대학구성원 전체와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아직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등록금의 인상 문제는 매년 대학당국과 학생회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확립해야 하겠다.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이해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인상의 폭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줄다리기기가 아니라, 대학발전의 청사진을 놓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현실조건들의 종합정리를 바탕으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요구된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과거에서 미래로 전진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공유

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적 의미를 최고의 기준으로 하여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 교육 외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고, 특히 불법적인 재정의 유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풍토 자체를 쇠신해 나가야 한다.

③ 총장직선제의 보완

지난 7월 초 대학교육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총장직선제의 폐지가 제안되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다. 총장직선제의 폐해로 거론된 내용은 총장 후보 추천의 폐쇄성, 파벌 조성과 반목 심화, 지연·학연 등 교수사회의 외적인 요소에 의한 선출, 직선총장들의 무력함(대학구성원들 눈치) 등이다.

총장 직선제는 6년여의 실험기간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며, 지금도 그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사립대 92년 26개교, 94년 40개교). 권력과 재단에 의해 조종되는 총장은 문제이지만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민주총장의 증거이다. 총장직선제는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대학자율성의 확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교수대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들(국교협, 사교련, 민교협)이 아니라, 총장단에 의해 폐지론이 제기된 것은 비민주적 시대의 행태가 온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총장선출의 문제는 실력과 지도력을 갖춘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몇 가지 문제점의 발생을 구실로 비민주시대의 어용적 총장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보완책으로는 총장후보 공청회, 임기후 평가 작업,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토론회, 총장후보의 학내외 개방, 학식·덕망·지도력을 갖춘 교수의 추대가 가능한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 등이 있을 것이다.

④ 평가제도의 도입과 정착

3~4년 전 강의평가제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을 때, 보수적인 교수들은 교권을 내

세우며 별배같이 일어나 그 비교육성과 시기상조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강의평가제를 권장사항으로 결정하자마자 강의평가가 여러 대학에서 실시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수구적이며 보수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교육적인 의미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면 즉각적으로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다가 상부에서 결정하여 하달하면 맹종해버리고 마는 태도를 내보인다.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자기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자율성과 창의성이란 조금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강의평가제뿐만 아니라 학과평가제를 거쳐 이제 대학종합평가제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교수들의 업적평가와 행정직원들의 평가도 당연시 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부 등은 대학간, 학내 구성원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대학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필요성 못지 않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제도의 도입의도와 관련한 신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들의 도입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거에 교수재임용제도와 학생들의 성적관리제도(상대평가, 학사경고제 등)가 그 본래의 명분보다는 교수와 학생을 통제 탄압하기 위해 도입 시행했던 경험을 우리는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각종 평가제도는 대학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기준 위에서 선별 도입되어야 한다. 그것은 낙하산인사, 부정 비리인사, 그리고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자 발생의 예방과 발견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와 반대로 유능한 비판자를 색출 추방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학평가제와 관련해서도 그간의 편파적인 지원으로 나타난 대학간 차등만 더욱 조장하여, 대학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평가제도가 자본주의

적 폐단의 극단화로서 나타나는 '비인간화'로 귀결되는 무한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수의 구성원이 성실하게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인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데에 효과적인 한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교과과정의 개정과 강의의 질 향상

① 교과과정의 개정

한 교육학자는 대학교육의 핵심인 교과과정의 개편과 교수방법의 개선 노력이 전무함을 지적한다. "교과과정은 독재정권 시대의 유물이었던 국책교과만이 일부 변경되거나 삭제되었을 뿐 대부분의 교과들은 거의 20년 전이나 또는 그 이전과 내용에 있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어떤 과목은 20, 30년 전의 내용이 그대로 가르쳐지는 경우도 많다. 대학에서는 대학교수의 학문적 권위와 사적 자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른 교수의 교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므로 대학총장이 주도하는 대학 당국이나 또는 학생집단으로부터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강하게 부각되지 않고는 실행이 몹시 어려운 분야이다."(『대학교육』, 제 61호, p. 36). 이러한 주장에는 교수일반, 즉 교수대중은 소극적이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추진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 온 이후에도 대학당국 뿐만 아니라, 학생집단도 교과과정의 개편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성실한 노력(요구)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교수(협의)회가 주도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이며 개방적인 방향에서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필수과목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대학간 학점인정 등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교육부가 추진하기로 한 학과의 통폐합은 교과과정의 합리적인 재편의 기회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과정 및 강의 운영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졸실업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취업시험과목은 전공과 무관하게 획일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성적은 취업과 거의 무관한 상태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학생들을 무조건 강의실로만 강요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고전적인 교과과정만을 고집해서도 안 될 것이다.

산학협동도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대학교육 과정과 노동현장의 수급 문제의 공동연구 및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의 공동 모색 등 보다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학생집단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학교당국과 교수단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공동의 노력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정상적인 수강만으로도 취업과의 연결이 가능해야 하고, 대학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준비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곤란하듯이 대학은 고전적인 교과를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정강이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양분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②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자는 학생들로부터 수강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 어느 노교수가 학부 1학년 때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권위있는 목소리로 열정적인 개론 강의를 하여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3학년 전공과목 시간에도 교재는 다르되 강의의 내용과 체계는 개론강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동일했고, 심지어 대학원 과정에서까지 교재만 다를 뿐(원서를 형식적으로 펼쳐 놓고 강의) 학부 때와 똑같은 내용을 천편일률적으로 강의하더라고 한다. 학부 3학년 때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고, 대학원에 와서는 으레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학점만 받고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생의 경험담이다. 어느 교수는 강의시간 말미에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한다. 학생이 한 학기의 절반 이상 성실히 강의를 듣고 난 후 질문시간에 질문을 했다. 그 학생은 부분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학적 접근의 시각이 다른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 후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학생들의 문제제기라면 언제라도 간단히 논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온 그 교수는 학생의 준비된 토론이 만만치 않은 단계에 접어들자 저속한 말과 함께 버럭 화를 내면서 토론을 중단해 버리더라는 것이다. 그 학생은 성실히 수강했고, 시험도 잘 치렀는데 학점은 F학점을 받았다고 한다. 이상하여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교수는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입으면 여지없이 보복한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준 이하의 일들이 대학강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또 믿기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 정도의 수준을 갖춘 것으로 공인되고 있는 10개 이내의 국립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진대 전국 130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현실이 어떨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내의 개혁이 어느 정도로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교수들 중 소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은 특정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불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쳐 들어 온 젊은 교수 중에도 있다. 이들과 함께 교수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대학의 교수요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중요한 것이다.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그런데 대학교수의 채용과정에서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0점과 100점으로 채점하는 등의 불법과 부정이 비일비재하다(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엄정한 기준에 의한 정리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권 보장과 엄격한 기준 적용에 의한 개혁의 실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학생이 되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대학의 강의방식이 초·중등과정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개방적 강의방식(토론식, 학생들의 준비와 발표 등)을 택한 강의에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대학강의에 대한 상식적인 기대에 전혀 못미치는 현실들에 비추어 교수-학습체제의 개혁은 획기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시도돼야 할 것이다.

3) 학문과 사상의 자유 확보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학문의 탐구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시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더구나 이론적 탐구에 있어서 그 방향과 영역이 제한된다는 것은 과학과 이론의 건강한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혁명과 반혁명의 격동기에는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더불어 사상적 대립 투쟁도 격해지기 마련이다. 냉전체제 속에서도 사상의 대립과 경직된 분위기는 사회 전반, 특히 학문세계의 불구름을 초래하고 만다.

한국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한 정치적인 요인은 독재체제였으며, 그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였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이승만이 정권의 창출과 그 연장을 위해 끊임없이 악용해 온 이래 30여 년간의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보존되고 활용되어 왔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새삼 구체적인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의 승리로 독재와 반공 대신 민주와 통일이 정치적 체제와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은 국민적 압력에 승복했다고 꾸미기 위해 입으로만 민주와 통일을 외쳐대면서 실질적으로는 독재체제와 반공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국민들은 의사민주화에 실망했고,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전체 국민이 민주와 통일이라는 대안에 실제로 희망과 기대를 갖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정권의 출범과 더불어이다. “어떠한 우방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고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민들에게 아직 의례적 선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사정과 개혁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실천뿐만 아니라 조

국통일의 추진에 대한 신뢰까지도 함께 심어 주었다.

분단과 반공이데올로기로 학문의 불구름을 면할 수 없었던 한반도는 통일과 더불어 학문세계의 온전한 복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준비단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은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도 갖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남한은 사회주의 관련 사상과 이론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소개를 시도하고, 북한은 자본주의 관련 사상과 이론들에 대한 적극적 탐구와 소개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회담과 협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으나, 정치적 협상의 일정과 별도로 민간차원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격변 이후로 좌파 이론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학술재단과 학회 등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 방면의 연구를 진작시켜야 한다. 정보기관의 차원에서 비판을 위해서만 연구하거나 사회변혁운동의 실천을 위해 단편적, 표피적으로 또는 교조적으로 수용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등에 대한 총체적 심층적 학술연구가 가능해져야 하고, 그 성과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특히 대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크며,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이 많은 토론을 시도하고, 합리성을 기준으로 공감의 영역을 점차로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개혁을 추진하던 문민정부 원년에 바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했다. 전위적인 운동세력이 문민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사회 각 부문의 온건 합리적인 세력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극우적 수구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했다. 다수의 합리적인 힘이 제대로 모아지지 못하고 청와대의 사정 및 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구경만 하고 있는 사이에 수구적 기득권 세력은 다시 고개를 들고 기회있을 때마다 반개혁을 선동하고 메카시적 이념공세의 돌풍을 일으

키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 조문단 파견문제로 시작된 '마녀 사냥' 열풍은 국제적 망신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조문 파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향소 설치의 문제가 된다. 분향소를 설치했다면 의법조치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언론과 합작하여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학생회 측은 분향소의 설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생운동 세력에 대한 공안세력의 공격에 대학총장이 가세함으로써 대학인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독재권력에 의해 임명된 총학장들이 권력의 총복으로서 학생운동 세력을 매도하고,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문민시대인 요즘에, 그것도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대학총장들이 근거없이 매카시적 방법으로 폭로선봉을 일으키는 것은 대학사회의 수치이며, 한국사회의 수치이다.

이 부끄러운 돌풍은 마지막 단계에까지 접어들고 말았다. 국립대 교수 9인이 집필한 교양 교재의 사상성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이 개명천지에 아직도 이만한 무지의 폭기가 자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강의와 관련한 대학의 개혁에서 하나의 모범이며 모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오히려 색출 추방해야 할 대상으로 매도해 버린 공안세력은 결국 그 엄청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을 위한 시행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매카시즘의 창시자 매카시의 영향력도 겨우 수년만에 무력해진 미국의 경우에 반해, 50여 년이 다 되도록 매카시즘이 활개를 치는 한국사회의 사상 풍토는 처참한 지경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세계적으로 신데탕트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마당에,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더 이상 쟁취의 대상이어서는 안 되며 확고하게

다져지고 보장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30여 년간의 군부독재 통치로 인한 교육풍토의 황폐화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물론 문민정부의 출현 덕분에 가능해진 현상이다. 그러나 유신시대에서 5공화국으로 넘어갈 때 전두환정권이 4공과 5공의 차별성을 얼마나 강조했으며, 6공정권이 5공까지의 한국정치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던가를 확인해 보면, 문민시대의 발언이 특별할 것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혁정책 실천의 의지와 결과이다. 이런 점은 특히 대학인들 스스로에게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화와 국제화를 말하면서도 민주적인 의지가 뚜렷한 인사와 국제적 감각(능력)을 갖춘 인사보다는 일차적 인간관계를 폭넓게 맺고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선출하고, 대학의 민주적 개혁의 대안이 많이 제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지 못하는 우리 대학인들이 먼저 의식과 자세의 전환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독재권력에 아부하며 온갖 불합리한 일들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그러한 구태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여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학내의 민주세력이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발언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

김익수/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보쿰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민교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및 호남사회연구회 회장으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지식인의 역사적 책임", "딜타이의 역사이성비판" 등을 발표했다.